

옛 광주교도소 5·18 암매장 발굴 조사 본격화



31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재단 회의실에서 법무부와 기념재단 관계자, 5월단체 대표, 발굴 전문가 등이 모여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 조사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다. 당초 지난 30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발굴 조사는 법무부의 협의 요청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5월 단체와 법무부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유해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준비에 들어간다.

법무부와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발굴 조사 기관은 31일 오전 5·18기념재단에서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한 실무 내용을 협의했다.

이날 법무부와 기념재단은 발굴 조사를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유해 발굴의 주체를 기념재단으로 못 박았다.

발굴 조사는 조현중(전 국립광주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연구소장이 총괄한다. 조 소장은 지난 1992년 광

주 신창동 유적을 발굴하는 등 국립박물관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 실무 작업은 민간 기관인 대한문화재연구소가 맡는다.

이들은 문화재 발굴하는 방식을 암매장 발굴 조사에 활용한다. 유해 발견 여부는 발굴 작업을 시작한 뒤 15~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장 부지를 제공하고 광주지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경찰청, 국방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유해 발굴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한다.

유해 흔적이 발견되면 기념재단은 즉시 법무부와 광주지검에 통보하고 검사 또는 법의학관의 참여 아래 '예(禮)'를 다해 유해를 수습한다.

기념재단이 추천한 법의·치의학 전문가

5월단체-법무부, 실무 내용 협약...발굴 주체 '기념재단' 문화재 발굴 방식 활용...잡초 제거 등 준비 오늘부터 시작

들은 유해의 검사와 부검 등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재단은 특히 전남대법의학연구소와 조선대 치의학연구소가 유해의 유전자(DNA) 비교·분석을 맡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행방불명자 가족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도 이에 공감하며 '5월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잡초 제거 등 발굴 조사 준비는 오는 11월1일부터 시작한다.

콘크리트 제거나 굴착 등 본격적인 발굴 작업은 법무부의 승인이 떨어진 뒤 들어가기로 했다. 재단은 늦어도 11월8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안했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이번 발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유해 발굴에 실패하더라도 땅 속에 남겨져 있는 흔적과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밀 발굴이 우리의 목표다. 가령 총을 맞은 사람들의 탄환 조각도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절기이기 때문에 주말에도 발굴 작업을 할 것"이라며 "발굴 조사를

위한 최첨단 장비가 있다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그런 장비가 없어 거절했다. 문화재 발굴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념재단이 우선 발굴하려는 장소는 교도소 북측 담장 바깥쪽 전체 300m 중 폭 3~5m, 길이 117m 구간이다. 80년 5월 당시 공수부대의 순찰로 인근 땅으로 일부는 농장으로 사용했고 3공수여단 16대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기념재단은 3공수여단 본대대장이었던 김도 소령이 1996년 5월29일 서울지검 조사 당시 작성한 약도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 곳을 암매장 추정 장소로 특정했다.

김 소령은 검찰 조사에서 '전남대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해 교도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3명이 밝혀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교도소 담장에서 3m 정도 이격해 매장했다. '잡초가 우거졌고 논과 밭, 그리고 500m 전방에 낮은 능선이 있다. '관을 사용하지 않았고 가마니로 시신 2구씩 덮고 묻었다. '5월23일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전남대에서 광주교도소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3명을 포함해 12구의 시체를 매장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약도까지 첨부했다.

신봉우 기자



중도 하차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30일 철회하고 국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7일 문재인 정부의 방송정약 저지를 이유로 국정보이콧에 돌입한 지 나흘만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국감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야당으로서 (국감 보이콧) 방송정약 옴에 대한 최소한의 형의 수단이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감 중단하게 된 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MBC, KBS 시장 교체까지 이뤄지게 되면 왜 국감 중단까지 했는지 국민들의 이해도 높이고 가라고 본다"며 "보이콧을 하면서 무엇을 얻어가고 무엇을 가져가고 기존 방식을 택하지 않았고 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최소한의 조치가 국감 중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정우택



우원식



홍준표

광주·전남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비율 최하위권

김도읍 의원 분석...광주 15위·전남 13위 그쳐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의에서 누락된 예산안이 얼마나 부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18년도 예산 반영 현황

에 따르면 광주의 국비 확보율은 15위, 전남은 13위에 그쳤다.

광주는 내년도 예산에 2조4124억원의 국비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1조7803억원을 반영해 73.8%의 확보율을 보였다.

전남은 7조1148억원을 요구해 5조5339원이 반영돼 확보율 77.4%를 기록했다.

광주는 경북 46.6% (6조9698억) 요구에 3조2445억원, 부산 65.9% (4조6806억) 요구

에 3조5824억 반영)에 15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울산(75.7%) 이어 13위에 그쳤다.

반면 인천은 2조6678억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요구액 보다 많은 2조6900억원을 반영해 확보율이 101.1%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충남은 97.3%(5조7971억) 요구에 5조6393억 반영), 3위 대전은 96.1%(2조9075억) 요구에 2조7950억 반영), 4위 경남은 92.4%(7조9157억) 요구에 7조3114억 반영)이었다.

2017년 국비 예산과 2018년 정부안을 비교해보면 전남은 -8.0%(17년 국비 6조205억)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광주는 0.8%(2017년 국비 1조7644억) 소폭 상승했다.

'SCC 예산 반영률이 낮아 '호남 홀대'가 재점화됐는데, 일반 예산의 국비 확보율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배가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가 복지프레임에 매몰돼 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규 기자

2017년도담사범제
강진방문의해
VISIT GANGJIN BAY KOREA

우리 삶에 만남이 필요한 순간

강진읍 17일간의 음악여행

강진만 제2회 초추는 갈대축제

The 2nd GangjinBay Reeds Festival

2017.10.27-11.12 일 강진만 생태공원

주최 강진군 주관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찾아오시는 곳 강진만 생태공원